

## 최근 가계부채 동향 관련 주요 Q&A

1. '16년도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,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?

- '16년말 가계신용은 1,344.3조원('15년말대비 +141.2조원, +11.7조원)으로,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
  - \* 가계신용 연간 증가율 : ('14)6.5% → ('15)10.9% → ('16)11.7%
  - 특히, 코리아세일페스타('16.9월말~10월)로 인한 판매신용 확대, 보험사(주담대 등)·새마을금고(집단대출 등) 대출취급 확대 등이 '16년 4분기 가계신용 확대요인으로 작용
    - \* 가계신용 증가(조원, 3Q→4Q) : (판매신용)1.9→4.8 (보험)1.9→4.6 (새마을금고)3.4→4.7
  - 또한,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('17.3월)을 앞둔 先수요 등은 주담대 증가요인으로 작용
- 그러나, '16.8.25·11.24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후속조치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
  - ① 은행은 주담대·기타대출 모두 '16년 4분기 이후 감소세
    - \* 은행 주담대 증가(조원) : ('16.10)+5.4 (11)+6.1 (12)+3.6 ('17.1)+0.7('16.1 +2.7)  
기타대출 : ('16.10)+2.1 (11)+2.7 (12)△0.2 ('17.1)△0.7('16.1 △0.6)
  - ② 상호금융은 담보인정비율 강화('16.10) 이후 비주담대 증가세 둔화
    - \*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(조원) : ('16.10)+1.3 (11)+0.8 (12)+0.7 ('17.1)+0.2('16.1 +0.4)
- ➔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, 부동산시장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시 '17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
  - 특히,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('17.3월) 이후에는 정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

2.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제2금융권은 증가했음.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지?

- '16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과도기적 先수요, 은행과의 금리 격차 축소, 수신호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증가세 지속
  - ①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시점까지 은행권 주담대·집단대출 등 수요가 과도기적으로 이전('17.3월까지 지속 우려)
  - ②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들의 금리유인 증가
    - \* 상호금융-은행간 신규취급 주담대 금리격차(bp) : (14.12)+102 (15.12)+49 (16.12)+35
  - ③ 저금리하에서 비과세 등의 특례로 제2금융권의 수신 호조
    - \* 상호금융 수신 증감(조원, 새마을금고 포함) : (14년)+25.5 (15년)+27.7 (16년)+32.7
- ⇒ 가이드라인 효과가 본격화되는 '17.下부터는 증가세 둔화 전망
-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  - (리스크관리 감독강화)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합 등에 대해 현장감독 실시 및 리스크관리 미흡 기관에 엄중 조치
    - \*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전 先수요에 대해 집중 관리·감독 추진
  - (구조개선 가속화)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, '17년 고정금리·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조정\*
    - \* (보험) 고정금리 25%, 분할상환 40→45% / (상호금융) 분할상환 15→20%
  - (여신심사 선진화) DSR를 통한 자율적 상환능력심사 강화 유도
  - (취약차주 지원)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, 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차주보호 강화

3. 은행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(풍선효과)하면서,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질만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?

- 은행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것은,
  - 은행권 →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,
  - **쑤 금융권에 선진형 여신심사 체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**
- 다만,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주의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
  - 서민·실수요층에 대해 저금리·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여 은행권 → 제2금융권 대출수요를 흡수
  -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·새마을금고·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
  -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 등으로 선진형 여신관행을 정착

4. 향후 가계부채 증가 전망은?

- '17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
  - 은행권은 금리상승 및 리스크관리 강화, 부동산시장 안정 등 상황에서 향후에도 대출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
  -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('17.3월) 이후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
  - 또한, '16.4분기 큰 폭 확대되었던 판매신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, '17년부터는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
- 정부는 '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유지하고, 질적 구조개선을 이루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
  -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·새마을금고·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
  -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차질없이 시행('17.3월)
  -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(여신심사방식 선진화)

5. DSR,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서민층  
·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?

□ DSR,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일의적으로  
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아님

① 일반적으로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부담까지 감안하므로  
DTI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산출되나, 확실적인 대출  
상한 규제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

②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소득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  
상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출여부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

※ 자영업자 등도 매출액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하여 소득자료로  
인정 가능 ⇒ 현실적으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는 매우 드문 사례

- 또한,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하여 오히려  
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 발생

□ 서민·자영업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공급하는  
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움

○ 생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는 정책자금\*을  
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

\* ① (서민정책자금) 4대 정책서민자금(미소금융, 햇살론, 바퀴드림론, 새희망  
출세) 공급여력을 금년 5.7조원에서 '17년 7조원(67만명)으로 대폭 확대

② (중금리 대출) 사잇돌 대출 한도소진 즉시 1조원 추가 공급(1조원→2조원)